# 이 대통령 "부동산 실수요자 지원책 촘촘히 마련"

## "불법·편법 동원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통합 저해 큰 주범 조세 제도 역시 국민 눈높이 기초 합리적 정비토록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 이것 때문에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가 진행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 대책을 만들어내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한편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너무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와 관련해서는 "환율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며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조기 종전이나 휴전 가능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석유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제재 강화를 제시했다.

여름철 재해 대책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투입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다"며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2년 차 국정 속도전'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년은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더라도 이제는 달려야 할 때"라며 "지금이야말로 국정 전반에 속도를 더욱 높여야 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에는 큰 돌 집어내는 데 주력했다면 큰 돌 대충 집어냈고 이제는 잔돌, 중간돌을 집어내야 할 때"라며 "일상적으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어떤 건지를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부 부처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다며 "정보공개에서 좀 더 열린 자세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새만금 RE100 산단 조기 구축 이뤄지나

## 민주 박지원 의원, 산업입지법 등 관련 3법 제·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21일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의 조기 구축을 위해 산업입지법,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새만금사업법 등 관련 3법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국가산단을 전환하는 방식이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를 처음부터 별도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국가산단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을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와 산업시설지구 등 필요한 일부 지구만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해 인허가와 사업 추진을 신속화하도록 했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부처 장관에게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신청권을 부여해 기업 투자 수요 변화에 따라 산업용지와 전력망 등 기반시설 용도를 적기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새만금은 국내 RE100 산업단지의 최적지"라며 "국내 최초 RE100 산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공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경매 보전단지 단기 차익 투기 차단

## 민주 윤준병 의원, '산림 투기 근절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1일 경매로 헐값에 취득한 보전산지를 정부의 사유림 매수사업에 되팔아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산림 투기 근절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사유림 매수 제도는 산림 보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으로 보전산지 등을 매입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투기 세력과 기획부동산업자들이 개발이 어려운 보전산지를 경매로 저가 취득한 뒤 국가 매수사업에 신청해 차익을 얻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지의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투기성 사유림의 매수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경매 취득 직후 국가 매수사업에 편승하는 단기 투기 거래를 차단하고, 사유림 매수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산림 보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돼서는 안된다"며 "성실한 산주들이 정당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 "모자응급의료 위기 극복, 과감한 예산 필요"

## 김대중 도의원 "도내 NICU 등 의료진 부족으로 모자응급의료 체계는 한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5)은 21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붕괴 직전인 전북지역 모자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북도 차원의 과감한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전북 모자응급의료 체계는 지역 내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의료진의 사의 표명과 원광대학교병원 신생아실 전임의의 잇단 사직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들 역시 업무 과부화에 시달이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출산연령이 높아지며 전북지역 고령산모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이와 함께 조산아 및 저체중아 역시 증가하며 고위험·중증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전북지역의 경우 분만실 병상 수 등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모자응급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사의 부족으로 인해 전북지역 모자응급의료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보건복지부가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의 위험도 및 중증도에 따라 권역별로 최적화된 진료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공모한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서 조차 선정이 보류되며 전북지역 모자의료체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북도가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많은 예산을 반영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전북도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만호 기자

# "국가 공공의료 거점, 남원에"

## 민주 박희승 의원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울 중구 방산동으로 신축 이전하고, 인근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수도권 의료집중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립의전원은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의전원을 다시 서울에 집적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전문의 사직 사태를 언급하며 "분만·소아·응급·외상 분야의 의료인력 부족은 지방이 훨씬 심각하다"며 "전문의 한 명의 공백이 지역 의료체계 전체를 흔드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월 제정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있다"며 "교육·수련·연구 기능이 모두 수도권에 남아 있다면 지방 국립의전원은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특히 남원의 입지 경쟁력을 강조했다. 남원은 2018년부터 국립의전원 설립을 준비해 왔고, 전북·전남·경남 접경에 위치해 광역 공공의료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남원에 자리 잡는다면 전북은 물론 광주·전남, 충청남부, 대구·경북 서부, 경남을 아우르는 국가 공공의료 중심축이 될 수 있다"며 "이는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자원과 국가기관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국가 미래전략"이라고 밝혔다.

박희승 의원은 정부를 향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부지를 조속히 남원으로 확정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단계적 남원 이전을 포함한 국가 공공의료 재배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국가 공공의료의 미래는 서울 집중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있는 의료체계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 정종복 대표의원, 민주 전국 광역의회 대표의원 연석회의 참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의 신임 대표의원인 정종복 의원(전주6)이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위상 정립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 민주당 대표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북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에 따르면, 정종복 대표의원과 장연국 (전)대표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의회 대표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연석회의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의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를 이끄는 사령탑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당면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전북자치도의회는 직전 대표의원으로서 교섭단체의 기틀을 닦고 활발한 연대 활동을 펼쳐온 장연국 전 대표의원의 성과를 이어받아, 이번 연석회의에서도 정종복 신임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냈다. /이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새만금특별자치체 추진 시·군간 오해 없도록

## 도의회 기획행정위 자치행정국 등 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염영선)는 21일 자치행정국, 대외국제소통국, 국제협력진흥원, 자원봉사센터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염영선(정읍2) 위원장은 도지사 인수위원회 파견 공무원의 배정부서와 현 근무부서간 연관성이 낮고, 일부의 경우 별도 선발절차 없이 파견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핵심 인력 파견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인수위 파견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것을 당부했다.

김창현(부안)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새만금 신항 등을 둘러싼 관할권 갈등으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의 추진 방향과 향후 해법을 질의하며 관련 시군간 오해가 없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재영(전주5)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분석과 진단 여부를 묻고 이를 조직개편과 인사에 반영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조은희(익산2) 의원은 전북의 고액체납 이월체납액이 약 255억 원에 달하는데도 올해 징수 목표액이 111억 원으로 설정된 이유를 묻고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세금 징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 도 자활근로사업 성과 자립 실적 관리 체계화

## 도의회 농복환위 업무보고 복지여성보건국 등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권요안)는 21일 복지여성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 군산·남원의료원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했다.

한준희 부위원장(군산4)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이수한 부모들이 교육 이후 활동할 수 있는 연계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교육 성과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남관우 의원(전주8)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전북의 보훈수당이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도비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아울러 준보훈병원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원거리 진료 불편을 겪지 않도록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보훈의료 기반을 구축하고, 정치권과 행정이 함께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해아 의원(비례)은 자활근로사업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참여자의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성과와 자립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의 적성과 희망을 충분히 반영한 직무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역시 장애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승필 의원(순창)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아동권리와 이용자 권리 분야의 F등급 시설이 확인된 점을 지적하며, 평가 결과가 단순한 등급 부여에 그치지 않고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F등급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해 아동과 장애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